

엠폍스 52명 중 50명이 남성...96% '성접촉'

**질병청 엠폍스 환자 역학조사...22명은 격리해제
고위험군 대상 노출 전 예방접종...3일부터 예약**

국내 엠폍스 환자가 3명 늘어 52명이 됐다. 환자 대부분은 익명의 사람과 성접촉을 한 남성이었다.

당국은 엠폍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3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엠폍스 환자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이 엠폍스 환자 세부 역학조사 내용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확진 환자는 3명이 추가돼 52명이 됐다. 이중 47명은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4월7일 이후 발생한 환자다.

환자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 25명, 경기 10명, 인천과 경남, 대구 각각 3명, 경북 2명, 대전과 전남, 강원, 충북, 충남, 부산 각각 1명이다. 환자 중 49명이 내국인, 3명이 외국인이다.

감염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34

건, 의료기관 신고가 17건,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중 확인된 밀접접촉자가 1건이었다.

추정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감염 추정 사례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해외유입 및 관련 사례가 6건이다.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이 51건이고 1건은 환자 진료 중 발생했다.

52명의 환자 중 남성이 50명이며 이중 47명은 20~40대다.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50명이었고 익명의 사람과 성접촉한 사례는 43명이다.

여성 환자 2명에 대한 감염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추정 위험 노출일로부터 첫 증상 발현까지는 평균 9.1일이 소요됐다. 최초 증상 발생일로부터 신고까지 본인 신고건은 평균 6.8일, 의료기관 신고건은 평균 8.9일이 걸렸다.

증상을 보면 모든 환자에서 피부 병변이 나타났고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하게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났거나 혹은

전구기 증상이 없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 환자는 대부분 경증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며 엠폍스 치료제 사용 환자는 28명이었다. 현재 30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22명은 격리해제 후 퇴원했으며 후유증 보고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환자의 진단일로부터 격리해제까지 소요일은 평균 11.9일이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동거가족 및 직장 내 접촉자 중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이증상이 보고된 사례도 없었다.

당국은 엠폍스 환자 증가에 따라 지역 사회 전파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 진단요원, 역학조사관 외에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 영국, 대만 등 주요국도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작년부터 고위험군에 대해 노출 전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에 따른 접종은 8일부터 시행한다. 3세대 백신(진네오스)을 이용해 피내 접종 1회를 한다.

임 단장은 "엠폍스 특성과 국외 접종 기준을 고려해 저위험 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기준은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시도별 피내접종 가능한 점종기관이 선정되면 즉시 구체적인 예방법과 점종기관 목록을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엠폍스 치료제(테코비리마트)는 504명분을 확보해 17개 시도 지정부원에 공급해 사용 중이며 현재까지 28명분을 사용, 476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폍스 전담병상도 지정 완료해 전국에 총 111개를 확보했다. 각 시도별 병상 사용율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환자 발생에 따라 필요시 병상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임 단장은 "엠폍스는 초기증상이 발열, 근육통 등 비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 진단이 어렵다"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위험군의 자발적인 검사와 노출 전 접종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은 "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강진소방, 관내 마을 이장단 화재예방 교육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불철 기간(2월~5월) 동안 임야화재 및 부주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소방, 덕병마을 '화재없는 마을' 조성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 2일부터 진도군 군내면 덕병마을을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담양소방, 건설현장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당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가 관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담양=박종영 기자



여수해경, 초·중·고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운영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계수)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 기자



나주경찰-동신대,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 2기 발대식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에서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치안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2기 유학생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나주=송준표 기자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광양경찰서 방문 치안현장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를 찾아 소통·참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광양=김현근 기자

월급 3개월 체불 악덕 사업주, '돈줄' 막힌다...강제 수사도

**고용부, 당정협의 거쳐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상습체불 범위 늘리고 신용 등 경제적 제재 강화**

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도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국민의힘과 가진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 이상으로, 24만 명이 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에 달해 사업주들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현재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신용제재, 명단공개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 금액도 체불액보다 낮은 실정이다. 또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을 제재하고 있지만,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재 대상 범위는 최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임금 3개월분 이상 체불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 확대한다.

이 장관은 "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약 7600개소"라며 "이 중 청산 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나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과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 제재를 강화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하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업주 용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자발적인 체불청산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 감소 등 까다로운 용자 요건 없애고,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용

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용자 한도는 1억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은 1~2년 거치 및 3~4년 분할 상환으로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대신 '대지급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일정한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그간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낮은 회수율과 부정수급 증가 등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액·반복수급 사업장은 집중 관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이자 부과 대상도 퇴직자에서 재직자의 체불임금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감독과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 한해 '공짜야근' 주범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즉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체불이 지속될 경우엔 재감독에 나선다.

이 장관은 특히 "재산은닉, 출석거부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2021년

어린이날 전국 비·바람 몰아친다...연휴 내내 흐림

5일 전국 강한 비...많은 곳 400mm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토요일 6일 새벽부터 잰아들겠다.

박정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3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내일(4일)부터 6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며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제주·지리산 부근은 50~100mm, 제주도

중산간은 200mm, 제주도 산지는 400mm 이상이다.

중부지방·전라권·경북북부·경남권은 30~100mm, 수도권강원영서는 120mm 이상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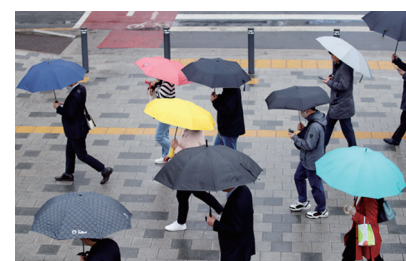
6일 새벽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30~50mm,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되겠다. 제주도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로, 5일 이후 6일까지는 전국의 대기가 불안정해 비가 내리는 곳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나타날겠다.

도시 및 해안지역은 풍랑특보 및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으니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강수 기간 풍랑특보로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될 수 있겠다. 특히 제주공항에는 급변풍의 가능성이 있어 지연 및 결항 가능성이 크다.

박 예보분석관은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 대비를 당부했다. 그는 "비슷한 비·바람이 치던 지난 2006년 5월



계 축대에 균열이 생기고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했다"며 "호우 속 70대 노인이 물포를 손보다 실종되기도 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기압 동진 속도에 따라 강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동진이 느려질 경우 6일 오후까지 전국에서 약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최이슬 기자